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6/ 30 통권 1525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Know-how와 Know-where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기업의 구매, 채용, 제조, 생산, 판매, 마케팅, 수금 전
과정의 연관성(특히 제조업 중심 한국에 중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 비상장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 비
교요소일람표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
장되었습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경
과하면 대손처리 가능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겸용주택의 구분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

개념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겸용주택
개념정의	① 주택사용 3층 이하 (지하 제외) ② 연면적 합계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① 4층이하 ②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 는 경우
소유자	1인(공유 가능)	다수인 구분 소유	1인(공유 가능)
구분등기	단독소유자 등기	구분등기함 (공동주택)	단독소유등기
1주택 판단	1단독주택임	여러주택임 (각 세대가 1주택)	1주택으로 봄
1세대 비과세	1주택이므로 가능	여러 층 소유시 다주택 (비과세 안됨)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체 비과세 가능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부분만 비과세
재산세	합 1주택으로 계산	각각 1주택으로 별도 계산	합산계산
종합부동산세	1주택으로 계산	각 소유자 별도 계산	1주택으로 계산
양도세	전체 양도소득	개별양도소득	주택과 상가의 양도소득 별도 계산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5 호 / 주간 26호

2021. 6. 30.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겸용주택의 구분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ESG 보고내용 인증	2
C E O 에 세 이	Know-how와 Know-where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원천세 신고 문의 - 우리사주 인출 관련 과세처리 문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 정의?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 해외 주요국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 상한규정 비교	9 10
직 장 인 Survival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할 일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4044, 2020.11.30) -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복잡한 주택 양도세 한 눈에 쏙...국세청 가이드 맵 공개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 가능함	12
세 무 정 보	-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 비상장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5 30 38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ESG 보고내용 인증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기업의 구매, 채용, 제조, 생산, 판매, 마케팅, 수급 전과정의 연관성(특히 제조업 중심 한국에 중요)

기업활동 → 실물흐름, 구매, 생산, 제조, 가공 → ESG 준수요점(지구환경, 인간생존과 정신건강) → ESG인증 → 실물의 내부회계관리처리 → 재무제표 작성 → 외부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격상

개념, 구분	외부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감사보고서	ESG 검토인증서
주요 목표	공익 직접보호, 외부이해관계자 보호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적정화로 공익 간접보호	지구환경, 인간사회, 소비자 건강 등 피해예방과 보호
주안점	결과물인 재무제표의 적정성	과정인 회계처리과정, 재무제표 작성과정	내부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지구환경, 외부사회에 끼치는 영향
작용효과	외부 채권자, 투자자에게 중립적 정보제공	재무제표 작성에 영향 주는 기업의 의사결정 표준화	기업외부의 인류와 지구환경 및 사회의 피해, 영향 최소화(지구멸망)
적용기준	기업회계기준, IFRS와 회계감사기준	표준 설정된 지침 없음	국제적 여러 측정기준(GRI, SASB, TCFD 등)
실행조직	외부감사인(회계사, 회계법인)	좌동	아직 중심조직 없음(약 6백개 이상 조직 난립)
감독기관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위, 금감원	정해진 바 없음(국회 논의 중)
비적용시 문제점	상장폐지	상장폐지사유	기업생존, 인류 흥망

Know-how와 Know-where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생명공학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계놈을 해독하여 질병치료는 물론 놀랄만한 응용분야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태양전지 그리고 1mm이하의 로봇의 개발처럼 R & D(Research Development)야말로 언제나 중요하다. 그것을 토대로 제품을 만드는 일인 Know-how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실체는 하나다.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일본 두뇌유출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교수는, 일본 회사에서 푸대접을 받자 돌연 미국대학으로 이적해서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기술개발은 연구의욕과 창의성을 샘솟게 만드는 사회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벤처기술, 벤처기업의 육성 방안도 건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정당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성과를 노리다 보니 한탕주의 기업, 무늬만 벤처인 기업도 넘쳐난다.

벤처기업도 머니게임보다 피땀으로 기술개발에 성실히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염불보다 잣밥에 끌린 재벌의 구태를 반복하는 바람에 온갖 수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차라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자. 또 기술만으로 연구소는 될지언정 기업은 안 된다. 기업은 기술 외에 재무관리, 판매시장 확보와 다양한 인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경영되는 조직체다. 품질 좋고 '값싼(Reasonable Price)' 최강의 제품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아무튼 핵심적인 기술과 Know-how는 한 곳에서, 한 기업에서 '값싸게' 모두 잘하기 힘들다. 각각 장점이 다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는 Know-how 못지않게 Know-where가 중요하다. 현대는 피터 드러커의 말대로 '글로벌화의 시대'다.

"싼 곳에서 생산하여 비싼 곳에서 판매한다." 이것이 Know-where 핵심적 전략이다. FILA는 철저한 국제분업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디자인은 미국, 개발과 소재공급은 한국, 생산은 동남아,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신발에 한국이 공급하는 소재가 65%를 차지한다. 신발산업은 조립산업과 개발 및 소재산업이다. 한

국의 신발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조립산업을 의미한다. 조립산업은 사람의 손이 좌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소재산업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손보다는 Know-how다. 그래서 소재산업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Know-how와 Know-where의 결합을 잘 활용할 때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있다. 즉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외자유치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선진경영기법을 갖춘 외국자본을 잘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는 이자와 상환 부담 없는 안정적인 외자확보 수단이며 생산과 고용을 늘린다. 또 첨단 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이 전시킨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한국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물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 동시에 외자의 참여는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또 수출을 증대시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수출하는데도 한국하기에 따라 외자의 참여는 기여할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8일 (금)	6월 21일 (월)	6월 22일 (화)	6월 23일 (수)	6월 24일 (목)
미	달	러 (USD)	1129.50	1132.20	1135.40	1132.40	1135.60
일	본	엔 (JPY)	1024.26	1027.54	1029.05	1023.41	1023.39
캐	나	다 달 러 (CAD)	915.06	909.43	917.83	920.20	922.95
홍	콩	달 러 (HKD)	145.47	145.83	146.23	145.80	146.24
위	안	화 (CNH)	175.73	175.43	175.59	175.18	175.23
유	로	화 (EUR)	1345.52	1343.98	1352.43	1352.31	1354.83
호	주	달 러 (AUD)	853.62	849.26	856.03	855.36	860.33
싱	가	폴 달 러 (SGD)	841.69	841.82	845.52	842.40	843.9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2.83	273.54	273.76	272.11	272.88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원천세 신고 문의

- Q**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외주자분중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의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출국목적: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인함
 2. 발령기간: 21년 4월~ 22년 3월 예정(약1년)
- 이럴 경우 출국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거주자 특례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으로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소득세법상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우리사주 인출 관련 과세처리 문의

- Q** 우리사주 인출 시 발생하는 과세대상 주식수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우리사주 인출 시 발생하는 과세대상 주식에 대하여 인출이 이루어진 월에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2. 과세로 처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월에 원천징수를 진행하는지
- A** 귀사의 의견대로 우리사주 인출일이 속한 월에 과세(근로소득)로 처리하면서 해당월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 정의?

- Q**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 사업용자산이라고 하면 토지를 제외한 자산총액을 이야기하는것인지, 재해손실이 발생한 자산이 고정자산중 일부와 재고자산 중 일부라면 고정자산 + 재고자산의 총액을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 토지를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을 사업용자산이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공제할 세액계산 산식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는데 재해로 상실된 자산총액을 재해로 상실된 자산의 가액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Q

외국인 임원에 대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역할을 맡고 계시고 15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임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국내에 183일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 배우자가 183일 이상 거주하는 상황"에서 183일 이상을 해외에 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외국인 임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거주자 판단을 위한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을 매매한다고 봤을 때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의 기간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인지요?

A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제반 사실관계(국내자산, 가족의 생활근거지, 출입 국내역, 직업 및 국내 경제활동내역 등)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자본적 지출)과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취득후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느냐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자산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지출의 구분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지출로 인해 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기비용 처리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산 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건당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해당 수선비를 손금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생산능력 증대, 내

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0.16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 (1)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2)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 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상기에 나열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토대로 최초 평가된 자산의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된다.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회계처리 방법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구조변경이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이므로, 해당 지출은 당기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에 반영하여 추후 감가상각으로 안분하여 비용반영하게 된다.

차) 자 산	1,000	대) 현 금	1,000
--------	-------	--------	-------

수익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경상적인 비용으로 자산의 애초 성능수준으로의 복구 및 유지하기 위한 지출인바, 수선비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차) 수선비	1,000	대) 현 금	1,0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현행	개정(2023년부터)
0원 대주주 아니므로 비과세	⇒ 실제 취득가 적용 시 1000만원(1억원 차익 중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율 20% 적용) 의제 취득가 적용 시 0원 가능(내년 말 주식 평가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차익은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공제하면 비과세)
	※ 의제취득가액은 2022년 12월말 공표하는 최종 시세가 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저가양도 부당행위 계산

구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상증법상 부당행위계산
저가양도	$\frac{\text{시가} - \text{대가}}{\text{시가}} \geq 5\% \text{ 또는 } 3\text{억원}$	$\frac{\text{시가} - \text{대가}}{\text{시가}} \geq 30\% \text{ 또는 } 3\text{억원}$
시가평가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우선,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평가시기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기간	



해외 주요국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 상한규정 비교

구분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 상한 비율	추가 조항
한국	일반공익법인 5%, 성실공익법인 10%, 20%	계열사 출자는 해당 공익법인 자신의 30%까지 인정
미국	의결권 있는 주식 포함할 경우 20% 제3자 이미 지배력 보유시 35%	제3자가 기업 지배력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한도 35%까지 상향
일본	50%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영 리기업의 개요 공시의무
캐나다	20%	2% 초과 시 국세청 신고의무
영국	없음	없음
호주	없음	없음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가입대상	총급여액이 4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대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	12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5년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할 일

1. Nobody to call on and to meet me

홍금을 터놓고 모든 일을 의논할 친구를 남녀 불문하고 두 명 정도는 꼭 만들어 놓으세요.

2. Nobody to call on by myself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땐 전화하든지 찾아 가세요.

3. Nothing to do

무슨 일이든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움직이세요.

4. Nobody to call me, and call to

지금 당장 전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고, 전화할 사람을 만드세요.

5. Nobody to invite me, and Noplace to attend

나오라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고 만나세요.

6. Nothing to learn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십시오.

7. Nothing to behold in hand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몫은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8. Don't be servile, but be proud

기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못 산다고 절대로 비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내가 살아 온 삶을 뽐내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 가능함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4044, 2020.11.30

질 의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과 관련하여
 - (질의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 ① 외상매출금 발생 당시의 약정에 따른 회수 기일인지
 - ② 채권회수를 위해 새롭게 변경하여 약정한 변제기일인지
 - (질의2)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
 - ① 저당권 등 설정, 사업의 계속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144, 2020.05.26

질 의

- A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이고, 개인주주 B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 개인주주 B는 A법인의 지분 50%를 C법인에게 매각하고, C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지분 50%)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62, 2020.08.25

■ 질 의

- (주)***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3년부터 해외공사 등 현지 업무수행을 위해 중국, 미국, 인도에 설립한 각각의 자회사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인도자회사의 주식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임
- * 중국:취득일'13.01.29.지분70%,미국:취득일'14.11.20.지분100%,인도:취득일'18.5.28.지분100%
- 질의법인은 해외 자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외 자회사만을 관리하는 사업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만을 관리하는 사업부를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 분할 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3년미만 보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 질 의

- A법인은 과자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1.21. 경기도 **시 **동 소재 주택과 부속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바(낙찰가액 810백만원)
- 주택에는 취득 전부터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으며, A법인은 당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 A법인은 이후 2016년 1월 초에 해당 주택을 철거한 후 2016.1.27. 매수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일인 2016.1.29.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양도가액 1.881백만원)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복잡한 주택 양도세 한 눈에 쏙... 국세청 가이드 맵 공개

2017년부터 8·2 대책부터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변화를 A4 용지 한 장에 담은 길라잡이가 나왔다.

국세청은 18일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가이드 맵은 각 부동산 대책별 달라진 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담아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A4용지 한 장에 담았다.

가이드 맵은 일종의 요약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이드 맵에 표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항목 번호를 찾아보면 된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 '자주 찾는 서비스',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받을 수 있다.

기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기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며 사후관리기간을 축소 하도록 했다.

또한 법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공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여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관세청, 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 국세청, 2021. 6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미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비교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7-1],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 동창회, 친목회, 중증,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채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text{금융소득}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 ①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 이하 함)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비교과세방법은 [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이하 함)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도 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이후
원천징수세율	22.0%	20.0%	15.0%	14%
(지방소득세율)	(2.2%)	(2%)	(1.5%)	(1.4%)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
-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원 납부, 835만원 수령
-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원 납부, 846만원 수령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 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를 인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발행하는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30%)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42%)로 종합과세 합니다.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5-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이자·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8] 예금·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수입시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0.3.10.인 경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19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20.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0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21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6-3] 2017.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에금이 2020.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기에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0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0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1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 (1) 2020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 ② 회 사 채 이자 : 50,000,000원
 - ③ 세금융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

☞ 세금융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제외됨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 = (8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 + (20,000,000 \times 14\%) \\ & = (7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 = 12,756,000 + 2,800,000 = 15,556,000\text{원} \end{aligned}$$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 \times 14\% = 100,000,000 \times 14\% = 14,000,000\text{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사례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0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text{원}$$

$$\bullet \text{Gross-up 금액} = 50,000,000 \times 11\% = 5,500,000\text{원}$$

$$\bullet \text{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text{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text{종합과세금액} + \text{Gross-up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액} + (2\text{천만} \\ & \text{원} \times 14\%) \\ & = \{(70,000,000 + 5,500,000 - 5,100,000) \times 24\% - 5,220,000\} + 20,000,000 \\ & \times 14\% \\ & = 11,676,000 + 2,800,000 = 14,476,000\text{원} \end{aligned}$$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비영업대금이익} \times 25\%) + \{ (\text{그외 금융소득금액} \times 14\%) \}$$

$$= (30,000,000 \times 25\%) + \{ (60,000,000 \times 14\%) \} = 15,900,000\text{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사례 3】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1) 2020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20,000,000 \times 14\% \\ & = (6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text{원} \end{aligned}$$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text{금융소득금액} \times 14\%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 = 60,000,000 \times 14\%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 = 8,400,000 + (24,900,000 \times 15\% - 1,080,000) = 11,055,000\text{원} \end{aligned}$$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7-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1,000\text{만원} - 210\text{만원(소득공제)}] \times 6\% = 474,000\text{원}$

② $370\text{만원} \times 14\% = 518,000\text{원}$

①과 ②의 합계금액인 99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7-4] 사업 소득과 이자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 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합니다.
- 다만,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Gross-up)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2011~2020귀속 배당가산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2009.1.1.~2010.12.31. 기간은 12/100)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 ① 배당가산액(Grosss-up 금액)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 ① 이자소득부터 합산
 - ②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 ③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 ☞ 자세한 내용은 [7-2] 계산사례 참조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0년 금융소득은 2021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2021.5.1.~2021.5.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기간 중 제공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만 가능)
-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4]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까?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 국세청, 2021.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상증령 § 12)

• 공익법인의 범위 합리화

- * '19. 1. 1. 이후 적용 (단, '18. 12. 31.에 구 상증령 § 12 5호~8호 및 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12.31.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상증법 § 50의4)

•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 1. 1.부터 '18.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음)

■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상증법 § 48②, § 78⑨)

• 주식 5%초과 10%이하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주식 10% 초과 20%이하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화

- 미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미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 * '18.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18. 2. 1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 38 ④)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사용실적에서 제외

- * '19. 2. 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자료 제공 확대(상증령 § 43의3⑥)

-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공시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
 - * '19. 2. 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기관
 - * '21. 2. 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 50의3①)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도 공시
 - * '19. 1. 1. 이후 공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재무제표 주석 기재사항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됨
 -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 50의3①, 상증령 § 43의3①)

- 의무공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22. 12. 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 미부과
 -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 50③, 상증령 § 43③)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정도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임
 -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 § 48②, 상증령 § 38¹⁸, ¹⁹)

- 성실공익법인에만 적용되었던 의무지출제도가 기준규모 이상(자산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등이 3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적용 확대
 - 다만,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제외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 48②)

- 증여일을 '사후관리 위반일'로 명확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 50, 상증령



§ 43)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기재부장관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재부장관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체계 개선(상증법 § 16②2호)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일원화함에 따라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를 10%로 하되,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위반시 5% 한도를 적용함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상증법 § 48⑪, 상증령 § 41의 2①·②·③)

-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③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초과 취임 금지, ④ 자기내부거래 금지,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상증법 § 48⑪)

-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요건 위반시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부과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미달 사용시 증여세 부과는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상증법 § 48⑬, 상증령 § 41의2·§ 80⑱, 국기법 § 49①4호)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다만,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 한도 적용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령 § 38⑤)

-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비율 80%로 일원화
*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상증법 § 38⑤)

-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제외
* '21. 2. 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 80⑩)

-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하고 경비가 동일한 경우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 48②, 상증령 § 40①)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상증령 § 38③)

-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봄
* '21. 2. 17.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상증령 § 80⑩)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가산세 부과 예외 범위에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추가
* '21. 2. 17.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상증령 § 43③·④, § 43의2①, § 43의3①·②)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관련

■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법 § 24, 법인령 § 39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정하였던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 '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단, '18. 1. 1. 이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구 법인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18. 2. 13. 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

■ 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지정시기 조정(법인령 § 38, 법인칙 § 18⑤)

- 법정기부금단체
 - 법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로 조정(2·5·8·11월)하고, 매분기 말일(3·6·9·12월)로 지정시기 조정
 - * '18. 4.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법인령 § 39①)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 * '18. 2. 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 3②)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출 시 시가
 - * '18. 2. 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 56⑥)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18. 2. 13.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법인령 § 39⑤)

-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 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단, 종교단체는 예외)
- 외부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의무 규정에 추가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단축(법인령 § 39⑥, 법인칙 § 18의2)

- 의무이행 여부 보고주기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단축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법법 § 75의4①)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로 인상됨(당초 : 2%)
 - * '20.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변경(법인령 § 39)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 지정요건 추가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의 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할 것
- 지정기간 개정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1. 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은 6년으로 함)
 - * '21. 1. 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변경(법인령 § 39)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점검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사유 추가(법인령 § 39)

- 지정취소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됨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통보(법인령 § 39)



-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 취소된 경우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목적 위반사항 등 적발시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 '21. 1. 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 38, § 39)

-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
 - * '21. 1. 1. 부터 시행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등(법인칙 § 18의3)

- (비영리법인 → 국세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추천신청서 등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
- (국세청 → 기획재정부) 국세청(관할세무서)은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 * '21. 1. 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법인칙 § 19, § 19의2)

-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종전 3개월) 이내로 변경
 - * '21. 1. 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 38⑧, § 39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상증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 '21. 1. 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 39①·⑤)

-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및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사유(상증령 § 38조⑧2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의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시 예외 인정
 - * '21. 1. 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사유 보완(법인령 § 39⑪, § 39⑧)

- ① 외부 회계감사, ② 전용계좌 개설·사용, ③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시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이 상증법 § 48②·③, ⑧~⑪ 의무위반에 따른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과 합산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됨

- (개정 전)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①~③ 의무위반시 지정취소 대상이었음
* '21. 1. 1.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 39①)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 '21.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법 § 75의4②, § 112의2, 법인령 § 155의2)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문서로서 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의 정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5년간)·제출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나, '21. 1. 1. ~ '21. 6. 30. 에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관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등(국기령 § 66 ⑩)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명단 공개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명단공개 요건 합리화
 - 명단공개 요건 판단 대상 기간에 불복청구의 기간은 불산입
* '19. 2. 12. 이후 불복청구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

비상장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 국세청, 2021. 6

I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1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상 유의사항

- 본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및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2429호, 2021.3.4. 이하 “훈령”이라 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업종, 매출액, 총자산가액 등 비교요소의 수치를 수록한 것임
- 본 책자의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에 의해 중분류 업종까지 당해 비상장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비상장기업 주식이 위원회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교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당해 비교평가액이 비상장기업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에서 유사업종의 업종명 및 분류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임
 -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다음과 같이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세세분류(6자리숫자)의 체계로 되어 있음

〈코드번호의 구조(예시)〉

코 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		
자	릿	수	코 드 번 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
①			C	대 분 류	제조업
②			15	중 분 류	음료제조업
③			155	소 분 류	알코올 음료 제조업
④			1551	세 분 류	발효주 제조업
⑤~⑥			155101	세 세 분 류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의 업종은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서 수입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주업종)임
-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은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훈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바목)
-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추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 일람표」를 이용하되, 당해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함(훈령 제23조 제3항)
- 납세자가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서 비교요소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의하여 「유사상장법인 추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훈령 제23조 제4항)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비상장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추가비교평가액」산정과 관련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발행주식 총수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한국거래소 및 당해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상장법인 추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훈령 제23조 제5항)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서 우측 일반기준 하단 1주당 가액 중 경상이익은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경상이익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의미함(훈령 제22조)
- 이번에 작성한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2021.5.31. 현재까지의 자료만 반영(법인 결산자료는 2021.3월말까지의 신고자료)되어 있으므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업종코드 순으로 작성되었음



<참고 1> 유사상장법인 선정시 비교요소일람표 이용방법

- ① : 평가대상 비상장기업의 업종이 상장법인이 없거나 2개미만인 업종인지 확인한다
- ② : ①항의 업종이 아니면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여 업종기준을 적용하되, 세세분류에서 평가대상 비상장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다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는 소분류까지만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 되는 분류단계에서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 ③ : ②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규모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인 경우 다시 ②항부터 시작한다.(세세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 순차 적용)
- ☞ <참고3>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참고(7페이지)
- ④ : ③항에 의해 선정된 2~4개의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일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일반기준 미충족으로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②항부터 다시 시작한다.(세세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 순차 적용)
- ☞ 참고자료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확인 참고사이트 모음>을 참고
- ⑤ : 비교요소일람표에서 ④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비교요소 등을 찾아 당해 비상장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한다.

<참고 2>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1) 유형예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사 상장 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 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 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 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 법인	자본 이익률
C	0.11	-	-	-	-	-	-	-	-
B	0.10	㉠	0.08	A	0.08	A	0.08	A	0.08
A	0.08	A	0.07	B	0.07	㉡	0.07	㉢	0.07
㉣	0.06	B	0.06	C	0.06	B	0.06	B	0.06
D	0.05	C	0.05	㉤	0.05	C	0.05	-	-
E	0.03	D	0.04	D	0.04	D	0.04	-	-
F	0.02	㉥	0.03	-	-	-	-	-	-

- 평가대상 비상장기업 : ㉣, ㉠, ㉤, ㉡, ㉢
- 유사상장법인(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 A, B, C, D, E, F

(2)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 현황

평가대상법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유사상장법인	A, B, D, E	A, B	C, D	B, C, D	A, B, C	A, B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로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낮은 경우로서 상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에 있는 1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 상위에 있는 1개법인과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및 하위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에 미달 (각각 1개업체)하므로 그 미달하는 법인(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인 경우 중분류 업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을 찾아야 하며, 그래도 2개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기업은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님

2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사례 1)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기업 "甲"의 내용〉

비 교 요 소								발행 주식 총수	액 면 가 액	자 본 이 익 률
개업일	직전사업년도		업종 코드	총자산가액	매 출 액	1주당 가액				
	결산 월	사업년도				경상 이익	순자산 가액			
2000. 1. 1.	2020 . 12	1. 1. ~ 12. 31.	153300	2,190,315, 986	3,215,126, 537	4,205	36,983	30, 000	5,0 00	0.0 645

- 평가기준일 : 2021. 6. 1
- 위 표의 비교요소는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2020.12.31.)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1주당 가액 중 경상이익은 훈령 제22조 제1항에 의해 계산(2개년도 경상이익의 단순평균값)하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훈령 제22조 제5항에 의해 직전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 [(자산총계-부채총계)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보충적평가액 : 31,830원 = [(28,832원 × 2) + (33,844원 × 3)] ÷ 5



☞ 상증령 § 54~56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가결산을 한 수치임

- 1주당 순자산가액 : 28,832원
-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3,844원

(1) 당해 비상장기업이 평가신청요건(훈령 제18조 제1항)를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평 가 신 청 기 준 (훈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6호)	여	부
1.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	○	
2.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3.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4.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것	○	
5.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유사상장법인 선정

- 아래 일반기준 및 규모기준(총자산가액, 매출액) 범위 내에 있는 상장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총자산가액 규모(비상장기업 총자산가액의 5배 범위 내) : 10,951,579,930원 (= 2,190,315,986 × 5배)
- 매출액 규모(비상장기업 매출액의 5배 범위 내) : 16,075,632,685원(= 3,215,126,537 × 5배)

(단위 : 원)

상 장 법 인 명	자 본 이익률	규모기준(훈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유사상장 법인여부
		총 자 산 가 액		매 출 액		
		금 액	범위 내 여부	금 액	범위 내 여부	
A	-0.3040	5,757,917,653	○	15,705,494,925	○	○
B	0.0119	9,402,845,865	○	26,957,271,570	×	×
C	0.0166	10,568,453,496	○	9,057,100,640	○	○

비상장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D	0.0170	32,989,842,430	x	49,283,813,010	x	x
E	0.0296	203,696,882,341	x	725,731,448,759	x	x
F	0.0351	8,068,530,541	○	8,516,775,529	○	○
G	0.0428	14,359,722,163	x	39,401,583,499	x	x
H	0.0430	2,942,785,550	○	3,760,147,344	○	○
I	0.0515	10,867,430,759	○	15,464,605,936	○	○
J	0.0782	10,593,793,463	○	9,442,128,462	○	○
K	0.0950	4,086,626,327	○	13,543,434,045	○	○
L	0.1214	10,669,899,529	○	14,659,732,674	○	○
M	0.1233	74,001,751,183	x	194,470,622,431	x	x

-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9조 제1항)에 부합되는 유사상장법인은 8개(위의 표 우측 「유사상장법인 여부」에서 ○표시된 것)가 존재하여 당해 비상장기업 주식은 훈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평가신청요건 충족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존재)
- ※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미만인 경우에는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인 될 때까지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 유사상장법인 8개 중 평가대상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으로 최종 선정(훈령 제20조 제2항) : 상위 2개 법인으로 J, K, 하위 2개 법인으로 H I가 선정됨

(3)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계산 (훈령 제21조) : 14,320원(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 : 원)

법 인 명	2 월 간 종 가 평 균 액	1 주 당 경 상 이 익	1 주 당 순 자 산	비 교 평 가 비 율	비 교 평 가 액 (주가 × 비교평가비율)
H	1,957	296	7,506	10.49	20,528
I	725	309	2,881	13.30	9,642
J	6,244	3,628	23,057	1.34	8,366
K	650	182	987	28.85	18,752
				합 계 액	57,288
평가대상법인	(甲) 법인	4,205	36,983	평 균 값 (합계액 ÷ 유사법인수)	14,322

- 유사상장법인 H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비율



$[{(4,205 \div 296) \times 3 + (36,983 \div 7,506) \times 2} \div 5] = 10.49$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교평가비율 계산식

$[{(비상장기업의\ 1주당경상이익 \div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경상이익) \times 3 + (비상장기업의\ 1주당순자산가액 \div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순자산가액) \times 2} \div 5]$

(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2 : 3으로 함)

- 유사상장법인 H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액

$[1,957\text{원} \times 10.49] = 20,528\text{원}$ (소수점 이하 절사)

⇒ 유사상장법인 I, J, K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평가비율 및 비교평가액을 계산함

(사례 2) 상장된 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유사업종 분류번호	유 사 업 종 명	상장법인수
02	임업	없 음
10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
12	금속광업	없 음
3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없 음
41	수도업	없 음
74	도매 및 상품중개업	없 음
85	보건업	1
9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없 음
94	인적용역	없 음
95	가구내 고용활동	없 음

- 상기 업종에 속하는 비상장기업은 유사한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이므로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1. 6

- 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소관 (고용보험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 '22.1.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시 규정할 계획
 -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 ②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③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④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 지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산재보험 관련)

●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7.1. 시행)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

- 려하여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수준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 예정임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 * '21.1.5.~'21.12.31. 입직신고: 100% 면제, '22.1.1.~'22.12.31. 입직신고 50% 면제

-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시행: 공포일 즉시)
 -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8년부터 도입되었고,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 * ▲ 300명 이상: '20.1.1. ▲ 30~300명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시행
 -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1. 7. 1.)
-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올해 7.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 *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시행: '21. 6. 9.)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기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기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중소기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기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
- ③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시행: 공포일 즉시)
-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 ('15년) 1,046건→ ('17년) 2,067건→ ('19년) 4,318건→ ('20년) 8,384건
 -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했다.(現 3~7일 단위 3회→ 48시간 단위 3회)
 -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근로기준법 (시행일: 공포일)

☞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 △ 형법 제270조의2(낙태 허용요건) 신설
 - 이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하였다.